

중국모델의 가능성과 한계**

이 경 희*

목 차

I. 문제제기	IV. 중국모델의 가능성과 그 한계
II. 후발국가 발전이론	V. 결 론
III. 중국발전모델의 담론	

[논문 요약]

미래 중국의 변화와 전망을 둘러싸고 중국위협론과 중국기회론, 문명 충돌론과 문명조화론, 자유시장, 법적 민주주의, 법의 지배, 좋은 거버넌스(good govemance), 인권에 대한 자유주의적 해석 등의 견해가 분분하고, 이런 논란은 여전히 팽팽하게 맞서 있다. 본 논문은 중국모델을 통해 경이적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지 그리고 중국모델론의 한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중국은 민주주의의 '과소'에도 불구하고 혼합(hybrid)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 당정은 우수한 위기관리 능력을 지녔으며, 구소련과 동유럽의 몰락 이후 경로 의존(path dependence)의 대상 없이도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으며, 체제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지 않았다.

중국이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독자적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은 '선진국 따라 하기'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기식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전형이다.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중국의 경험은 '개방'을 통해 세계화에 편승하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창의적 혁신(創新)을 병행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데 서구적 시각의 '근대화론'이나 '워싱턴 컨센서스' 보다는 '중국모델'론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중국모델, 기업가적 국가, 분권화, 리더십, 워싱턴컨센서스, 베이징컨센서스..

* 호남대학교 교수

** 이 논문은 한국동북아학회와 충남대 국방연구소가 공동주최한 학술대회(2011.11.11, 충남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임.

I. 문제제기

중국은 1978년 개혁개방을 한 이후 2010년 국내총생산(GDP)에서 일본을 처음 앞서며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으며 2020~30년경이면 미국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 당연한 결과로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세계적인 패권국이 될 것이라는 예측에는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경제적/정치적 규모와 지배력은 규범과 가치를 만들어내며 제도를 산출하기 때문에 가능한 예측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측은 향후 중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무서운 속도로 계속 성장한다는 가정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렇다면 중국의 지속적인 고도성장은 가능한 것일까?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실질적인 시장을 도입함으로써 자본주의 운영방식이 중국 전체로 확산되었으며, 그로 인해 중국을 자본주의 국가로 인식하는 데는 논리상 별 문제가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당시 경제체제는 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것이므로, 서구의 기준으로는 중국식 경제체제가 자본주의냐는 라는 질문이 다시 한 번 제기된다. 이윤의 추구라는 원칙이 지켜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국유이고, 자본주의 체제의 핵심 기제인 은행 또한 많은 경우 국가 소유이며, 사적 소유권 역시 완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과연 중국은 그래도 자본주의일까라는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중국만의 독특한 개념을 동원하여, 중국식 자본주의가 서구의 그것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학계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다음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을 들 수 있다. 하나는 중국의 등장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중국위협론'(China threat)의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의 경험이 다른 나라, 특히 후발공업국의 경제발전에 귀감이 된다는 '중국모델'(Chinese model)론의 입장이다. 대체적으로 전자는 1990년대 중반 무렵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에서 중국을 바라보는 대표적인 시각으로 제시되었다면, 주로 미국과 그 주변 국가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각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다.¹⁾ 후자는 2000년대 들어 제3세계 내지 발전도상국가들이 인식하는 중국의 이미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에 대한 이런 긍정적/부정적 인식은 과연 중국이 선진국에는 위협적이고 후진국에는 모범이 되는 국가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해준다.²⁾

이 글은 주류적 특히 서구적 시각에서 제시하는 후발국가들의 발전모델에 관한 이론 및 중국발전에 관한 기존 논의들의 쟁점들을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논쟁을 위한 하나의 토론

1) 강선주, "신국제질서논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9(2009), pp. 2-3.

2) 이런 문제의식을 다룬 연구로는 Randall Peerenboom, *China Modernizes: Threat to the West or Model for the Rest*(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참조.

거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국모델 자체에 대해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지 않았다. 그보다는 '중국의 부상'에 이어 그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중국모델〉론이 부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개념의 방법론적 유용성과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성과를 이루게 했던 몇 가지 전략적 원칙과 조건,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오게 했던 중국특색의 발전방식은 분명, 기존의 다른 발전 패턴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발전과 변화에 관한 특징이 '가시적이고 두드러진 성과물'이며, '기존 발전방식과는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지녔는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추구하는 제3국이 추종하거나 참고할 만한 적용성을 갖느냐'의 여부 차원에서 〈중국모델〉이 성립가능하며 유의미한 것인지는 좀 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적어도 〈모델〉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특정 시점, 특정 분야, 특정 주제에 국한된 중국의 특징이 아니라 좀 더 긴 역사적 관점과 거시적 관점에서 중국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탐구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모델〉론은 개혁과 발전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을 가장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분석적 개념으로서만 유용하다고 일단 그 한계 내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특히 2001년 말 WTO 가입을 계기로 중국의 경제체제가 시장경제로의 전환단계를 넘어 국제적 규범과 질서에 공식적으로 편입되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해, 소득수준 및 향상으로 이제 중국은 질적으로 다른 단계에 진입한 중국의 체제전환은 개혁 목표와 추진방식 그리고 발전전략에서도 큰 변화를 보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체제전환 자체가 목표가 아닌 전환이후(post-transition) 시대의 발전모델에 대한 모색과 제도적 정착이 요구되는 단계에 진입하였다. 체제전환과정에서 드러난 수많은 모순들의 문제는 곧 '성공의 역설'과 '중등 소득의 함정'으로 설명되어 질 수 있는 바, 과연 이러한 커다란 문제를 〈중국모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즉 최근 중국 지도부가 추구하는 〈조화사회〉나 〈과학적 발전관〉 등의 발전패러다임의 수정과 신발전전략의 모색 역시 〈중국모델〉의 관점에서 조명할 수 있는지에 그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즉 비록 새로운 발전 모델로서의 적실성 여부는 불명확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의 분석적 개념으로서 중국모델이 중국의 개혁과 발전에 대한 기존의 이론과는 다른 시사점을 제시해줄 뿐 아니라 중국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보다 풍부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결국 이 논문에서 취급하고자하는 논의의 의도는 '워싱턴 컨센서스' 나 중국위협론 등 서구적 시각으로 중국을 보려는 이론적 한계를 〈중국모델〉을 통해 반드시 극복해야한다는 이론적 함의보다는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과정이 사회과학적인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보편성을 보이는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는 경제적인 과정인지를 확인하고자 함에 있다. 더불어 연성과학으로서의 변수와 변수사이의 관계가 분명하게 노정된다면 이는 일반성 이전에 구체적 사례로서도 충분히 그 의미를 갖는다고 할 것이다.

II. 후발국가 발전이론

1. 근대화론(서구발전이론)

서구의 정통패러다임에 따르면, 근대화(modernization)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도와 선진국의 앞선 기술 및 자본을 도입 확산시켜야 한다는 대전제를 하고 있다. 서구발전이론은 영국, 미국 등 선발 공업국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해 구축된 이론으로, 어느 사회도 일정한 발전요인만 충족되면 기본적으로 동일한 발전단계를 따르며, 전통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그리고 고도 대중소비사회에 이른다는 단선적인 발전단계론이다.

1950~60년대 자유주의와 다원주의 계보의 근대화이론, 1970년대 신마르크스주의의 지적 전통을 따른 종속이론과 그 변형의 이론들, 1980년대 신웨버주의자(neo-weberian)들, 그리고 90년대 근대화이론의 부활 또는 신근대화론의 등장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비교정치학의 주요 이론들은 정치발전과 경제발전 사이의 이론적, 경험적 상관관계의 정립에 끊임 없는 집착을 보여 왔다. 그러나 여러 전통의 이론과 연구들은 서로 매우 다른 결과를 주장하였고, 아직도 두 변수 사이의 관계에 관한 학계의 패러다임적 합의는 없는 것 같다.

시장주의적이며 기업자유지향의 근대화이론은 국가의 경계선을 뛰어넘는 즉 국가의 경계선은 시장의 활동에 부정적이므로 시장의 자유가 있는 곳은 합리적인 공간이며 이를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곳은 비시장적이며 자유가 억압받는 지역이라고 명명 짓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전제로 하고 있는 '자유'는 보편적 가치를 함의한 것으로 이해되지만, 실제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는 자유시장, 자유무역, 그리고 자유로운 소유(즉 사적 소유권) 등에 우선되며, 나아가 "개인의 자유는 시장과 무역의 자유에 의해 보장된다고 가정"된다.

이러한 점에서 하비(Harvey, 2007b, 3)는 부시의 연설문을 세심하게 확인하면서, 자유의 개념이 "자유(freedom)와 자율(liberty)은 미국적 가치라는 사고에서부터, 이들은 보편적 가치이며 지구를 위한 전지전능자의 지적 설계라는 사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제 국가는 보편적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하지만, 실제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자본의 편에서 이윤 있는 자본 축적의 조건들을 고무시키는 것을 기본 임무"로 수행한다. 하비에 의하면, 이러한 신자유주의 국가의 사례는 이라크 전쟁 후 미국이 이식한 이라크 정부, 그리고 1973년 작은 9월 11일의 쿠데타 이후 칠레에 수립된 정부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주변부에서 수행되었던 실험이 중심부의 정책 입안을 위한 모형이 되

었다고 주장된다. 근대화³⁾는 명백하게 ‘서구화(westernization)’ 아니면 매우 특정하게 ‘미국화(Americanization)’라는 것이다.

환언하면 강한 것은 옳은 것이며, 다수의 성공사례는 곧 표준이며 기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회과학적으로 오류이다. 소위 서방(the West)과 기타지역(the rest)이라는 이분법적 대비에서 전자는 선진적이고 발전한, 근대화한 사회인 반면, 후자는 후진적이고 저개발상태의, 비근대화 사회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2. 동아시아모델론

신흥공업국가군(NICS)로 표현되는 동아시아국가⁴⁾들의 60-70년대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해 동아시아모델이 등장하였다. 동아시아모델의 공통점은 높은 수준의 저축과 높은 비율의 민간투자, 인간자본의 적극적 육성정책 등이 성장을 선도, 경제기초변수(economic fundamentals)의 건실한 유지, 효율적 산업정책 등 정부의 효율적 지원을 통한 수출주도형 전략, 사회간접자본 개발, 외국기술의 적극도입, 개발을 선도하는 금융기관의 육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경제발전에 있어 국가역할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바, 국가주도의 경제발전이 시장 주도보다 효과적이며 국가 역할의 특징으로 국가가 강력한 사회적 행위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를 행태적, 구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국가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산업 정책과 더불어 국가는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통해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시장 보완적 역할을 자임했으며, 적극적으로 자원의 전략적 할당과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민간 경제를 지도, 조정했다. 즉 국가가 정치적 지도력으로 시장에 동기 부여와 위협적인 요소를 직접 제거하고 이익과 갈등처리 기능을 수행했다는 것이다.

동아시아국가들은 공통적으로 발전단계(독재정권수립·경제정책주력·민주화·개방화)를 차례로 거쳤다는 점이 이 모델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적 자본주의는 성장 지향적, 공업 지향적 및 대외 지향적 전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⁵⁾ 또한 안정된 그리고 실력중시의 정부 리더십, 인적 자본과 물적 자본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형평을 수반한 성장, 그리고 공동체를 강조하는 동아시아적 제도도 중시된다.

3) 역사적으로, 근대화란 17세기부터 19세기 사이에 서부 유럽과 북미주에서 전개하기 시작하여 다른 유럽 국가로, 그리고 19세기에서 20세기에는 남미, 아시아 및 아프리카 대륙으로 번져나간 사회, 경제, 정치적 체제의 형태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다”(Shmuel N. Eisenstadt,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66), p. 1).

4) 여기서 말하는 국가는 근대국가에 한정한다. 물론 근대국가에 관한 논의도 매우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국가는 폭력(법, 제도, 정책 등)을 독점한 통치기구’라는 M. Weber류(流)의 개념을 따른다.

5) 백종국, “‘한국발전모델’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계에서 나타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p. 16.

동아시아국가들 모두는 과도할 정도로 빠른 성장을 추구한 결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수요가 창출됐고, 나아가 국내저축의 의도적 활성화를 통해 싼 자본에 산업이 의존하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국내산업을 방어하기 위해 보호주의가 적용된 결과 비교역 산업, 특히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지면서, 생산성 부진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또한 환율의 의도적인 평가절하와 초기의 임금 억제정책은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국내적으로는 소비 부진이 이어졌고, 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또한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제국가들이 수확체감의 법칙에 걸린 결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기업들이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하면서 수익성 있는 수출증진에는 한계가 드리워지게 됐다.

문제는 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환이 시급해졌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지극히 어렵워지면서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정경유착의 결과, 시장의 특징인 경쟁이라는 장점이 활용되지 못함으로써” 자본배분의 왜곡 현상이 두드러진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또한 국내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이 낮았기 때문에 고용창출 능력이 저하되면서 내수 중심의 새로운 경제체제 구축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에는 국제무역 환경이 변화되어 동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정책을 실시하던 무역보조금과 관세특혜와 같은 국내기업에 대한 보호주의가 점차 사라지면서 경제발전의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신자유주의의 확산으로 동아시아모델은 그 영향력과 적용 가능한 모델로서의 가능성은 훼손되었다. 한국의 경우에도, 신자유주의의 영향으로 정부정책의 효과성은 상실되면서 재벌에 대한 통제력도 약화되기 시작했다.

3. 사회주의 체제전환이론

일반적으로 체제변화(system change)라는 개념에는 이른바 ‘체제전환’(transformation)과 ‘체제개혁’(reform)이 모두 포괄된다. 코르나이는 현실사회주의의 체제변화를 개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그 변화의 내용에서의 ‘깊이’(depth)와 속도에서의 ‘급진성’(radicalism)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내용에서의 부분성과 속도에서의 온건성일 경우 그것은 ‘개혁’(reform)⁶⁾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내용이 전면적이고 속도에서도 급진적일 경우 그것을 ‘혁명’(revolution)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⁷⁾ 코르나이가 설명하는

6)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와 그와 연합된 국가기구 내부 또는 외부의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의미하며, 이러한 개혁은 급진적이고 대규모인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제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 제도의 변화를 추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제도의 변화를 통한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체제전환은 사회주의체제가 경제부문뿐만 아니라 공산당 일당독재의 포기와 같은 정치부문에서 급격한 변화와 단절이 이루어졌을 때를 의미한다.

‘체제개혁’에 대한 적극적 정의는 지배이데올로기와 권력독점, 소유형태, 조정기제 중 하나에 깊숙한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변화의 방식이 적당하게 급진적이어야 하며 (moderately radical), 완전한 체제이행 즉 탈사회주의로의 체제전환은 개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체제전환과정이란 그동안 유지되어 오던 질서형태가 다른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비해 ‘개혁’은 현재의 집권자와 그와 연합된 국가기구 내부 또는 외부의 그룹에 의해 추진되는 ‘위로부터의 개혁’을 전제하는 것으로서 급진적이고 대규모적인 혁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전환을 통해서 점진적인 체제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은 시장경제의 경쟁체제, 제한된 임기를 가진 정부의 공공연한 경쟁민주주의, 그리고 독립적 사법권의 검열 체계 속에서 이 (서구적)보편개념들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깊이있고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여 경제적 자유화와 정치적 민주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동유럽과 소련이 진행한 급진적 체제전환은 명령경제와 시장경제는 상호 간에 전혀 이질적 체제이어서 어떤 중간적 위치도 심각한 모순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혁에 대한 사회적 저항을 초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여 정치적 불안정성이 발생하고, 이는 불안정한 시장체계를 불러 경제위기를 악화시켰다.

폴란드는 1990년 1월 1일 동유럽 국가 중 처음으로 급진적인 체제전환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이미 1992년에 체제전환은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5년이 지난 1995년의 시점에서 볼 때 실제 개혁의 성과는 기대에 훨씬 못 미쳤다. 그 주요 문제는 인플레이션, 재정불균형, 대외균형, 경기후퇴 등이었다.

소련과 동유럽의 체제전환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1980년대 외국 자본에 의존하여 자국 내 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대외부채비율이 높아져 재정적자가 심각했다. 둘째, 서유럽은 외부자로서 내부에 활동하는 행위자들의 특성과 규약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상황과 ‘활동여건’에 대해서도 무관심을 보였다는 점이다. 셋째는 민주화 정치세력(반 공산계열)이 구 공산계열 정치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기획하면서 급진적으로 진행되었던 점 등이다. 그래서 급속한 자유화정책 (전통적 통제기구들 특히 계획관청, 자재배급기관, 국가무역 관리기구 등을 해체)과 사유화정책(사유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완비)이 외부자의 정치적 의도에도 부합시켜야 했다. 동유럽의 개혁은 정치적 격변 및 구 공산체제의 붕괴와 함께 시작함으로써 따라서 진화론적 제도변화의 가능성이 없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개혁은 중앙권력이 안정적 때문에 점진적인 정책변화와

7)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제도변화가 가능했다.

더욱이 구소련과 폴란드의 경우에는 전체 주민의 거의 100%가 계획경제에 포괄하고 있었지만 개혁개방 당시 1978년 중국은 전체 노동력 중에서 농업인구의 비율은 71%. 따라서 중국은 농업노동력이 비 국영부문으로 이동이 가능하여 경제잉여를 생산해 낼 수 있었다. 또한 구소련과 동유럽은 거대기업 중심이었으나 중국에서는 중소기업비율이 거의 50%에 달하고 있었지만 중국은 애초부터 경제 및 정치구조가 훨씬 분권적이었다. 공업총생산과 공업총고용에서 국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국은 더 낮았다.

4. 워싱턴 컨센서스

1980년대 외채위기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경제상황이 심각해지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처방이 워싱턴을 무대로 이루어졌다. 당시 미국 의회와 행정부, 각 경제부처, 연방준비이사회, 세계은행과 IMF 등 국제금융기관 및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들이 발표한 중남미 경제정책 개혁안들과 연구보고서들은 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를 형성하여 중남미 지역 주요국가의 시장지향적 경제개혁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중남미의 외채위기가 이 같은 세계적 차원의 정책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은 위기의 성격이 국제적이었기 때문이었다.⁸⁾

국제경제연구원(IEE) 보고서가 제시한 신발전전략은 다음과 같다. 즉, 중남미가 자립적 경제성장(self-sustained economic growth)을 회복하고 외채문제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그 첫째는 대외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추구하여 수출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인 수입대체를 이루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쟁력 있는 환율 도입, 과도한 수입규제 철폐, 국제적으로 용인하는 수출인센티브 활용이 요구된다. 둘째, 국내저축을 신장하고 이를 투자활동에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실질금리의 적정수준 유지, 소비보다 저축을 장려하는 재정정책, 예산적자 축소,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셋째, 국가의 경제적 역할을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규제 완화, 재화·용역 생산자로서의 국가 기능의 축소, 교육·보건 등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는 것이었다.⁹⁾

중남미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국가를 경제영역에서 완전히 배제하여야 하며, 최저임금 법규정과 물가관리, 보호관세, 정부보조금, 공기업을 폐지하여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정부재정의 균형을 유지하고, 통화증발을 총생산증가에 한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시장 메커니즘이 국가의 지나친 통제로부터 벗어나 보다 효과적으로 움직일

8) 김원호, “중남미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p. 278.

9) 위의 글, p. 279.

수 있도록 공기업의 민영화, 경제자유화, 보호주의의 철폐 등을 단행하라는 것이었다. 결국 1930년대 이래, 그리고 1970년대를 통하여 주류를 이루었던 국가의 경제적 역할 증대 경향이 반전되는 전환점이었다.

신자유주의는 우선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축소와 이에 따른 자유시장으로의 복귀를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 자유 무역과 자유 투자가 촉진되며, 자본과 기술, 그리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된다. 가격에 대한 통제는 사라지고,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요구도 없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탈규제된 시장은 경제성장과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는 자유무역은 누구에게나 유익하며 자유경쟁은 누구에게나 편익을 제공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워싱턴 컨센서스는 정책 조언으로 재정긴축(fiscal austerity), 민영화(privatization) 그리고 시장자유화(market liberalization)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¹⁰⁾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수단이 아닌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상기의 정책들은 마치 그것 자체가 목적인 양 너무 급하고 과도하게 밀어붙여졌고, 따라서 그것 이외에 필요한 또 다른 정책을 배제하는 부작용 또한 두드러질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애초의 의도 혹은 목적과는 배치되는 부작용, 즉 긴축 재정정책은 불경기를, 높은 이자율은 겨우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망치는 결과를, 그리고 민영화와 자유화는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잘 안된 사회에 많은 비용을 초래하게 된다.”¹¹⁾ 실제 이러한 주장은 ‘승자를 위한 만찬’일 뿐 개인의 진정한 자유나 권리와는 무관하거나 오히려 억압하면서, 자유기업 또는 민간자본이 국가에 의해 부여된 모든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기대 밖의 성과가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해되고 있다. 우선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장경제라는 단순 모델에 기초하고 있는 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 그것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균형모델을 의미한다. 이것이 워싱턴 컨센서스가 시장 근본주의(market fundamentalism)에 기초한 신자유주의(neo-liberal)로 불리는 이유임은 물론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조차 자유시장 정책은 거부되는 경우가 많았고, 결과적으로 정부와 시장 간의 균형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도 논쟁이 진행 중이다. 설사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이 선진국에는 어울린다고 가정하더라도,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그렇게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결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장 시스템은 명료하게 확립된 재산권, 그리고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정(사법권)이 있어야 하지만 개발도상국에게 이렇게 잘 정비된 체도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시

10) Joseph E. Stiglitz,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2), p. 53.

11) *Ibid.* pp. 53-54.

장체제는 경쟁과 완전 정보를 필요로 하지만, 잘 작동하는 경쟁적 시장이 하루 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다른 분야의 개혁은 수반되지 않은 채, 한 분야의 개혁만이 이루어지는 경우 사태는 오히려 악화된다는 사실이다. 연쇄성(sequencing)의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하지만 이데올로기는 그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장체제로 옮겨가라고 강요한다. 그러나 이론과 역사는 연쇄성이 무시되는 경우 상황이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다.”¹²⁾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워싱턴 컨센서스가 실패한 이유는, “역사가 다르면 조건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면 제도 도입 및 건설의 방식이 달라져야 하는데 이런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데”¹³⁾ 있다고 평가되는 것이다. 이는 인류 역사가 보편성에 의해서만 산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사회문화적 조건과 리더십과 국민성에 의해서 달라지기 때문이다.

Ⅲ. 중국발전모델의 담론

1. 중국특색사회주의

중국발전모델의 기원은 마오쩌둥(毛澤東)의 사회주의건설 시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모른다. 그 이유는 중국이 건국 직후 소련식 발전모델을 채택했으나 실패한 뒤 줄곧 소위 ‘중국 실정’(國情)에 맞는 발전 방식을 나름대로 모색해 왔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학계에서는 중국모델의 연원을 둘러싸고 각기 상이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후자는 ‘현대화’라는 국가목표를 이룩하기 위해 그간 중국이 노력했던 근대 역사의 전(全) 과정, 특히 중국공산당의 성립 이후부터를 중국모델의 일부로 간조하기도 한다. 이는 ‘농촌의 도시포위’(農村包圍城市) 등 기존의 공산주의운동 방식과는 달리 중국이 독자적인 혁명 전략을 추진하여 정권 획득에 성공한 경험을 중시한 것이다. 또 일부 학자들은 마오쩌둥 시기와 덩샤오핑 시기를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현대화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추진한 각기 다른 두 시기로 보고, 그 전체는 “계승, 발전, 이탈, 교정”(繼承, 發展, 背離, 糾偏)의 과정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국내외 학자들이 〈중국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나 ‘건설’시기에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보다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한 최근의 성과에 고무되었기 때문인데, 1980년대 초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¹³⁾ 실제 중국은 개혁 개방을 통해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 집중

12) *Ibid.*, p. 74.

13) 蔡拓, 探索中的中國模式,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05년 제5기, p. 12.

적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에 진력해 왔고, 이와 동시에 그런 노력이 체제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과정에서 중국식 발전방식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런 노력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라는 개념으로 집약되었다.¹⁴⁾ 무엇보다 중국은 초기 개혁 과정에서 마오(毛)시기 중국의 문제점이 단순히 마오쩌둥이라는 한 개인의 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 어떤 제도적 한계 때문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했으며, 사회주의체제 내에서도 자본주의적 요소의 도입이 이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용인될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탐구했다. 그 이유는 중국 경제를 보다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을 사전에 기획하는 차원보다는 개혁의 실천에서 나타난 과격적인 정책들을 사후적으로 또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해 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이 기존의 이념적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¹⁵⁾ 따라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라는 신(新)개념은 혼란스러운 체제변화의 과정에서 국가가 지방과 기층, 그리고 기업과 개인에게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여러 가지 실험적인 정책들이 제도(사상)적 기초 위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발휘했다.

중국 지도부는 중국특색사회주의를 추진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요 원칙과 기제를 마련했다. 먼저, 기존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전환을 촉구하고 그것을 합리화하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른바 ‘현대화 건설’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선부론’(先富論)의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개혁 프로젝트에 전 인민이 동원되기를 기대했다. “일부 지역 및 일부 인민이 먼저 잘살게 되는 것”이 체제 내에서 허용되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개인이든 조직이든 정당화될 뿐 아니라 심지어 장려되도록 함으로써 이익추구 행위가 자본주의적 악습으로 터부시되던 기존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선부론의 제기와 그것의 공식 인정은 계급투쟁에서 경제건설로 전환된 국가목표의 실현을 위해 개인이나 조직, 그리고 당과 국가를 막론하고 자본주의적 행위 규범을 기본 원칙으로 공유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시장화의 결과로서 초래될 빈부격차를 일정 기간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로도 활용되었다. 즉 궁극적인 목표인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실현하기 전(前)단계로서 생산력 발전에 주력해야 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부의 불균등 배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화기제인 것이다.

1989년 천안문사건에 대한 반작용으로 시장경제 개혁에 저항하는 보수 세력의 발언권

14) 이는 1982년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덩샤오핑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고, 그 후 중국식 개혁과 경제발전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되다가 덩 사후 15차당대회(15大)를 통해 공산당 당규약에 ‘덩샤오핑이론’으로 삽입됨으로써 공식 이데올로기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 각각 다음을 보라.

15) 초기의 이데올로기적 정당화 작업은 주로 개혁 정책이 어떻게 사회주의의 핵심으로부터 이탈하지 않은 것인지를 보여 데 초점을 두었는데, 그것은 비록 마오쩌둥사상을 전면 부정하진 않았지만 상대적으로 정통 마르크스-레닌주의로의 복귀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 강화되면서 “중국의 궁극적 개혁목표가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냐”라는 이른바 ‘성사성자(姓社姓資)’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상황속에서 개혁개방정책의 후퇴를 우려하던 덩샤오핑은 ‘남순강화’라는 일종의 정치적 이벤트를 통해 개혁개방정책의 성과를 선전하고 시장경제 도입의 정당성을 역설하면서 개혁세력이 다시 정세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기를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1992년 ‘社會主義市場經濟論’은 당 14기3중전회에서 통과된 〈사회주의시장경제체제 건설에 관한 약간의 문제 결정〉(이하 〈결정〉)이라는 문건을 통해 구체적 개혁과제를 제시하였다. 〈결정〉에서는 “전면적추진중점돌파(整體推進 重點突破)”로 표현되듯이 더 이상 주변부 개혁이나 새로운 경제요소 도입을 통한 외연확장(增量改革)이¹⁶⁾ 아닌, 기존 체제의 핵심영역에 대한 개혁방침(存量改革)을 분명히 했고 중점 개혁과제로서 재정세제 개혁(分稅制 실시), 금융체제 개혁(다양한 상업은행 설립), 외환관리체제 개혁(이중환율제도의 단일화), 국유기업 개혁(현대적 기업제도 건설), 사회보장제도 개혁(국가중심에서 국가-시장보완 기제로)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다.¹⁷⁾

2. 신권위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에 대한 국내적 합의 달성의 증대한 전환점이었던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와 제14차 중국공산당 대회에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선언은 개혁개방의 기초가 후퇴하는 보수적 정치상황에서 전개된 극적인 전환과정이었다.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는 체제전환기 중국이 정권 및 체제의 안정과 경제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추진하는 가운데 창출해낸 기존 사회주의이론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수정이자, 중국식 발전모델의 초기 논의를 포괄하는 것이다.¹⁸⁾ 그런데 당시 중국이 고민한 것은 경제 문제만이 아니었다. 1980년대 증반 무렵 정치체제개혁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는데, 1986년의 학생시위와 1989년 천안문사건은 이런 당시의 사회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 것이다. 이 무렵 중국 내에서 비록 경제 개혁의 속도와 범위에 대해선 상이한 의견들이 있었으나 시장경제의 부분적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반면 정치 분야 대해선 기존 체제의 문제점은 잘 인식하고 있었으나, 개혁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¹⁹⁾ 서구식 민주주의를 채택할 수는 없다는 대전제 하에서 보면, 선택의 여지는 그다지

16) B. Naughton은 이러한 개혁방식을 ‘계획 밖에서의 성장(growing out of the plan)’으로 표현했고 (Barry Naughton,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중국에서 ‘增量改革’으로 표현했다(吳敬璠, “如何實現穩定和有效的增長,” 中國經濟信息, 271(21), 2003, pp.55-69).

17) 吳敬璠, “如何實現穩定和有效的增長,” 中國經濟信息, 271(21), 2003, pp. 75-80.

18) 중국의 체제전환과 이데올로기적 수정, 그리고 그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한 보다 종합적인 논의는 이희욱,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서울: 창비, 2007)을 참조.

19) 기존 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당 지도부의 인식은 소위 ‘8·18’라고 불리는 덩샤오핑의 다음 연설에 잘 나타나 있다.

많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시장경제적 발전과 일당지배를 결합할 수 있는 명분은 동아시아 개발독재의 논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1980년대 후반 들어 중국의 지식인들은 동아시아 발전 경험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통해 ‘신권위주의(新權威主義, neo-authoritarianism)의 논리를 창출했다. 학자들 간에 다소간의 의견 차이는 있지만, 그것의 기본 아이디어는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일사불란한 시장화 개혁을 추진해, “선(先)경제발전, 후(後)정치민주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²⁰⁾

그 후 이는 천안문사건과 소·동구 사회주의권의 붕괴가 중국 사회에 준 충격으로 인해 보다 보수화된 이론으로 진화한다.²¹⁾ 소위 ‘신보수주의’의 논리가 바로 그것이다. 기본적으로 신권위주의의 논리적 연장선상에서 국가 특히 중앙의 능력과 권위를 강화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보다 역점을 뒀다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다. 이밖에도 중국 사회의 변혁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론적 목소리들이 있으나 국가 정책노선과의 친화성 내지 연관성을 기준으로 본다면, 당시 민족주의적 정서를 배경으로 신보수주의의 담론이 1990년대 말까지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²²⁾

〈표 1〉 중국모델의 담론: 세 가지 논리 유형

구분 \ 시기	1980년대 초	1980년대 말-1990년대 초	2000년대 초
주요 담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신권위주의/신보수주의	베이징 컨센서스
주 체	중국 “정부”	민간 “학계”	“해외” 인사
등장 배경/목적	통치노선 및 체제전환의 합리화	경제발전과 정치체제간의 관계 설정	중국적 경험과 특징에 대한 외부의 평가
개념의 성격	국가 정책 선택의 사상적/규범적 논리	사회 변혁의 이론적 담론	발전 패러다임의 실천적/현실적 대안
비교/준거 대상	마오 시기 중국/소·동구 사회주의권	동아시아 NICS	서구 선진국
국내외적 함의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방어적 의미	미래방향 제시를 위한 정책 제안적 의미	반(反)신자유주의의 공격적 의미

3. 베이징 컨센서스

중국의 독특한 경제발전 방식은 2004년 라모(Joshua Cooper Ramo)가 ‘베이징 컨센서스

20) 신권위주의론에 대해서는 Mark P. Perracca and Mong Xiang, “The Concept of Chinese Neo-Authoritarianism: An Exploration and Democratic Critique,” *Asian Survey*, Vol. 30, NO. 11 (1990), pp. 1099-1117; Barry Sautman, “Sirens of the Strongman: Neo-Authoritarianism in Recent Chinese Political Theory,” *The China Quarterly*, No. 129(1992), pp. 72-102;

21)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서울: 나남, 2006), pp. 55-63.

22) 그밖의 자유주의, 신좌파, 사회주의민주, 기타 소위 ‘제3의 길’ 등 당시 중국 내에서는 다양한 사회변혁 사상이 제기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pp. 64-105.

스'(Beijing Consensus)라는 개념을 제시하여 중국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이에 대한 국내외적 관심과 논의가 보다 활성화되었다.²³⁾ 이는 비록 외부적인 시각이 내외부의 논란을 가져왔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의 새로운 화두를 던짐으로써 국제사회가 “중국 위협 여부”라는 진부한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중국의 발전패턴과 그 파급효과에 대해 주목하도록 다시 한번 주위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라모는 ‘베이징 컨센서스’(The Beijing Consensus)라는 이름으로는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징과 장점으로 부터 논의를 출발이었다. 우선 과거와는 다른 혁신의 원칙(innovation theorem)이 중국에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 즉 21세기 중국의 경우 저개발 상태의 국가는 낮은 수준의 기술(tailing-edge technology)에 의존한다는 전통적인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이미 개발된 첨단 기술(bleeding-edge technology)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²⁴⁾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최근의 논의는 중국의 본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토론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선 애초 논리의 출발점인 혼란(chaos)과 모순(contradictions)의 개념과 관련하여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다른 역사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점이 강조된다. 한마디로 특정 시점에 이르러, 경제적 혼란, 농민의 발란 그리고 왕조의 교체가 지속됨으로써 지금 현재에도 혼란은 공산당 정권의 가장 큰 두려움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방대한 영토 그리고 다양한 인종 및 종교의 공존 때문에 국가 자체가 늘 분할적인(fragmented) 성격을 띠고 있는 모순 또한 중국만의 특징이라는 주장이 뒤를 잇고 있다. 그렇다면 결국 이를 어떻게 통제하며 극복하느냐가 관건인데, 따라서 공산당 일당 독재에 기초한 통치가 합리화되는 이유는 충분하다는 설명이다.²⁵⁾ 여기서 통제기능을 상실한 중국은 상상할 수 없으므로, 중국의 경우 출발부터가 서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서구의 잣대로 중국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라는 결론이 내려진다.

요약해 보면, 중국의 독특한 배경에 기초하고 있는 중국식 모델은 다음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우선 서양의 국가와 사회라는 이분법(state-society dichotomy)이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사회구조가 뿌리내리고 있는데, 이는 곧 국가와 사회가 서로를 침투하며 하나의 실체로 승화되는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 시민사회(civil society)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것은 물론이다. 다음으로 경제조직 또한 독특해서, 서구와 유사하게 시장에 기초한 경쟁이 살아있는 반면, 주요 기업과 은행, 그리고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절대적인 개입 또한 공

23) Joshua Cooper Ramo, *The Beijing Consensus*(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24) Joshua C. Ramo, *Op. cit.* p. 11. 라모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예를 들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중국 정도의 저개발 상태라면 구리로 만든 전선만을 써야 하지만 중국은 지금 최첨단 기재인 광케이블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5) Stefan Halper,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ieth Century*(New York: Basic Books, 2010), pp. 206-208.

존한다는 주장이 뒤를 잇게 된다. 중국의 오래된 시행착오의 결과가 그러하므로 이를 바꾸는 일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독특한 사회 및 경제조직을 통해 국가(정부)의 남다른 위상이 분명해지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다른 국가를 지배하지는 않겠다는 평화와 조화의 원리를 대외정책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²⁶⁾

중국 특색 사회주의는 노선 및 체제 전환의 합리화를 위한 자기 규정적 형태를 떠나, 신권위주의론은 중국에서의 경제발전과 정치체제 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결론이며, 베이징 컨센서스는 개혁과 발전의 중국적 특징에 대한 외부(타인)의 평가이다. 따라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국가의 정책 선택과 관련된 사상적·규범적 논리라면, 신권위주의는 사회 변혁의 이론적 담론이며, 베이징 컨센서스는 발전 패러다임의 실천적·현실적 대안이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신권위주의는 동아시아 신흥공업국(NICS)을 준거로 하여 중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 내지 나아가야 할 방향제시라는 데 국한된 것이라면, 베이징 컨센서스는 '반(反)신자유주의적 발전 패러다임'이라는 보다 공격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비록 많은 비판과 논란의 여지는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중국의 경험이 타국에 대해 어떤 유익한 참고가 될 수 있는지, 그 국제적 적용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수준으로까지 위상이 제고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신권위주의, 그리고 베이징 컨센서스는 각각 중국이 처한 당면 고민에 대한 해법이나 시대적 상황에 대한 해석을 담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는 문제를 어떻게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할 수 있는지의 고민이 주로 1980년대 초 개혁이 구체적으로 시작될 무렵의 것이었다면, 경제발전과 동시에 정치체제의 변화를 어떻게 유도해야 하는지의 고민은 경제개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가시화된 1980년대 말 무렵이었으며, 중국의 발전 경험이 타국에 참고가 될 것이라는 평가는 중국의 고도성장이 세계적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 최근의 일인 것이다.²⁷⁾

4. 중국모델

2000년대 들어 '중국모델'에 대한 논의가 재차 촉발된 것은 중국의 국내외적 상황이 또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즉 중국이 암묵적으로 추종의 대상으로 간주했던 동아시아 모델도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부터는 비판적으로 인식되었고, 이로 인해 중국 사회 내부에서는 그 대안 모색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그리고

26) Wei Pan, "The Chinese Model of Development," Oct 11, 2007, London(<http://fpc.org.uk/fsblob/888.pdf>), pp. 2-3.

27) 전성홍, "중국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통권 116호(2007/2008 겨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 28.

이는 '신자유주의'와 그에 기초한 해외의 경제발전 경험에 대한 진지한 검토로 이어졌다.

특히 당내 이데올로기 분야의 책임을 맡고 있는 리창춘(李長春) 정치국 상무위원이 중남미를 방문해 해당 지역 지도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로부터 신자유주의의 파급효과와 워싱턴 컨센서스의 실천 경험에 대한 충고를 받았으며, 귀국 직후 내부 토론 형식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 중국 사회과학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2003년 7월 '신자유주의 연구팀'이 조직되어 그 발전모델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진행되기도 했다.²⁸⁾

중국모델의 개념은 개혁과 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어떤 현상들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모델이란 “중국에 1970년대 말 이후 경제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온 각종 국가정책의 근거를 이루는 전략적 구상과,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에서 발견되는 일정한 패턴”을 지칭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국의 경험에는 다른 나라와 구분되는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국모델이 개혁과 발전에서 나타나는 중국적 특징을 총칭하는 것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측면에서, 혹은 어떤 의미에서의 특징인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자들이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난해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서로 다른 맥락에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혼란스럽게 제시하기 때문이다. 필자의 이해의 의하면, 그간 학계에서는 다음 몇 가지 '범주'를 둘러싸고 중국적 특징에 관한 논의를 진행시켜 왔다.

첫째, 개혁의 과정과 결과, 즉 접근 방식이나 추진 전략, 그리고 그로 인한 체제변화의 정도 등에 근거해 중국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어떤 국내외적 여건이 개혁 자체와 그 방식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개혁의 초기 조건으로서 마오 시기의 유산이나, 신자유주의적 경향 내지 세계화 추세와 같은 외부 환경적 요인 등을 중시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다 많은 연구들이 개혁의 구체적인 전략과 그 결과에 대한 분석에 집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의 방식과 결과로서 정치와 경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사회주의적 성격은 어느 정도 유지 및 변화되는지, 그리고 정치체제의 존속 여부는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이 주요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둘째, 개혁이나 체제전환보다는 고도성장의 비법, 즉 경제발전의 요인에 주목하여 중국의 차별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선 주로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이나 서구 자본주의 국가가 비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는 대부분 경제관련 정책들이 포함되는데,

28) 그 일환으로 여러 차례에 걸친 세미나를 개최했고, 여기에서 발표된 40여 편의 논문 중 25편의 논문을 수록한 다음 연구결과물을 출판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대부분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는데, 이는 편집 주관기관의 정치적 성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FDI(외국인 직접투자)나 화교자본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 자본조달 방식, 도시화 없는 공업화나 농민공의 역할이 강조되는 중국식 도시화, 그리고 국가 주도의 시장경제 도입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상술한 비교 대상 국가들이 경험하지 못한 ‘중국적인 것’의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²⁹⁾

셋째, 중국 자체가 지니는 특수성을 강조하는 바, 중국의 ‘국가 실정’(國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떻게 다르고, 또 이것이 개혁과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로 초점을 두는 것이다. 예컨대, 방대한 국가 규모나 지역적 다양성과 같이 대국으로서 중국이 지니는 특징은 다른 그 어떤 나라의 사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이를 중시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중국의 기본 조건들이 바로 중국과 다른 나라를 구분하게 하는 중요한 특징일 뿐 아니라 또 그런 요인들이 중국적 특징을 나타나게 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³⁰⁾ 사실상 중국모델과 동아시아 모델과의 상관성에 대한 문제는 매우 논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발전패턴이 동아시아 발전모델적 특징과 별개라고 할 수는 없으나 양자간에는 상당 부분 차이점도 지니고 있어,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문제를 보느냐에 따라 학자마다 각기 상이한 평가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동아시아 모델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서로 유사하고 또 다른지,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밖에 중국적 특징에 직접 초점을 둔 것은 아니지만 중국모델의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역시 중국모델의 주요 구성요소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 하나는, 발전의 비용부담, 즉 개혁의 부작용 내지 성과의 대가로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중국모델을 평가하는 것이다. 흔히 지적되는 바와 같이 경제발전과 빈부격차, 분권화와 지방주의, 당의 영도와 간부부패, 공유제 중시와 지지부진한 국유기업 개혁 등이 그것인데, 중국모델에 대한 부정적 시각 또는 중국 모델의 당면 과제라는 의미가 다분하다. 아른 하나는, 중국모델의 파급효과, 즉 모델로서의 적실성 평가와 직결된 것이다. 중국의 경험이 다른 사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인지, 참고 및 학습의 유용성이 있는지, 또는 다른 국가 및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등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중국모델이란 중국의 변화 과정과 그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징 및 의미를 가장 포괄적이고 함축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분석적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29) Alvin, Y. So(ed.), *Remaking the Developmental Miracle, Origins, Transformation, and Challenges* (Armonk, New York: M. E. Sharpe, 2003).

30) 다음 논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중국경제의 독특성을 경제체제의 이행, 경제발전의 수준 및 구조, 대국경제의 특성 등 세 가지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경제학연구』, 제53집 2호(2005), pp. 185-214. 경제발전 조건과 관련하여 중국인 스스로가 인식하는 중국의 국정은 다음 자료에 잘 나와 있다.

IV. 중국모델의 가능성과 그 한계

1. 중국모델의 가능성과 특징

1) 중국모델의 가능성

후-후발국가로서 중국은 '근대화론'이나 '워싱턴 컨센서스'에 입각하지 않고 성장과 발전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체제나 제도의 보편성과 일반성은 각 개인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논의하듯이 어느 국가 또는 어느 사회(문화)의 '다름'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적 보편성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모델은 발전이론과 가치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중국의 발전이 보여준 체제의 효율성과 함께 중국체제가 갖고 있는 억압적 성격이 병존하지만 그 체제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선택한 발전전략은 유의미하며 특정시기의 개발도상국가에게는 '근대화론'과 '워싱턴 컨센서스'적인 처방보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분명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30여 년 동안의 중국의 성장은 특수한 중국적 상황을 조건화시켜 오늘에 도달했다. 즉 국가중심적이지만 국가가 직접 자본가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제도개혁을 위해서 분권화를 실시했고 이를 통한 인류사의 어떤 국가보다도 큰 국가규모와 이에 따른 지구적 영향력(global impact)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중국의 결과물은 민주화와 근대화를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 후-후발 개발도상국가들에게 주는 중국모델의 가능성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의 발전경험 혹은 중국식 발전모델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먼저 체제전환 국가에게 중국의 경험은 성공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개혁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전제조건임을 알려준다.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사회주의적 정치질서 즉 공산당일당지배 체제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며, 어쩌면 전환과정에서는 더 유효한 체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³¹⁾ 다음으로 중국의 경험이 개발도상국가에게 주는 함의도 매우 큰 것이다. 개발도상국은 초기 추격 전략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에 대한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학습이 단순한 모방이 나 제도의 무비판적인 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해당 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창조적 학습 혹은 혁신(創新)과정이어야 함을 의미한다.³²⁾

31) Peter Nolan, *Transforming China: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London: Anthem Press, 2004), pp. 3-4.

32) 胡鞍鋼, “對中國之路的初步認識,” 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崔之元,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 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田春生, “理解‘中國模式’的制度視角,” 『當代世界與社會主義』, 5, 2005.

현재 연구수준에서 중국모델 담론이 갖는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게 신선하고 가치 있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중국적 특수성'이라는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즉 지난 30년간 중국의 시장전환과정과 현재의 체제유형이 서구적 경험과 이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것으로서, '현실'과 '이론'사이의 넓은 간극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구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유력한 담론공간을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위커핑(俞可平 2006, 11)은 “중국모델은 세계화시대에 개발도상국으로서 중국이 취한 일종의 사회현대화 전략이며, 이는 개혁개방과정에서 점차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온 세계화의 도전에 대한 대응전략이고 거버넌스(治理, Governance) 모델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다음 몇 가지 함의를 갖는 것이다.⁴⁾ 첫째, 시기적 측면에서 중국모델 담론은 주로 개혁개방 이후 시기 중국의 독특한 발전전략과 성공적 경험에 대한 연구를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중국모델은 세계화에 대한 일종의 중국식 대응전략인데, 이는 세계화의 이념적 기초라 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응전략으로서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셋째, 중국모델을 이미 완성된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실천적으로나 이론적으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모델로서 간주한다. 이상의 함의를 갖는 '중국모델'의 개념은 개혁개방 이후 현재(및 이후 전망)까지를 포함하며, 특정한 이론과 이념에 기초하기 보다는 '가치중립적'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독특한 발전경험과 현실을 선진 시장경제 국가의 경험과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전제하에, 기존이론에 기초한 연역적 접근보다는 중국적 특수성에 주목하려는 귀납적 접근을 통해 중국 정치경제체제의 특수성을 개념화·일반화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³³⁾

중국은 '공산당의 영도'라는 원칙하에 일당체제를 유지하는 전제에서 시장화 개혁과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은 일당지배체제 하에 30년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을 이룩한 최초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한 쌍의 결과물’(couple product)로 간주하던 기존의 지배적인 이론이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도 바로 여기에 있다. 개혁 후 당의 권위나 통제력이 약화되었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는 여전히 논쟁적인 문제이지만, 최소한 현 시점에서 당의 위상에 근본적인 도전이 되는 어떤 정치적 세력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논란은 여지가 없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시장과 기업은 정치·사회제도에 '맞물린'(embedded) 상태에서 태동되었고 성장하였다.

'중국모델' 담론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변화는 두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먼저 중국식 발전모델의 이념적 정향 측면에서 지난 1990년대에 비록 제한적이라 할지라도 신자유

33) 이문기, “WTO시대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수정과 '중국모델'의 모색,” 『東亞研究』, 제54집(2008년 2월), p. 87.

주의 정책 이념이 점차 확산되어 왔던 과정에 비하면, WTO 체제 편입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의 무분별한 확산에 대한 경계와 대안 모색 노력이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과학적 발전관', '조화사회 건설론' '평화굴기론'이라는 새로운 통치 이념의 정립이 시장 만능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반성에 기초했다는 점과 빈부격차 완화와 노동자, 농민 등 소외 세력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노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중국의 발전모델이 세계화에 적극적으로 편승하면서도 개혁을 위한 도구 차원에서 신자유주의 이념을 제한적으로 수용할 것임을 의미한다. 즉 앞으로 중국의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전면적 거부는 아니더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구적 수렴보다는 '중국식 제3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³⁴⁾

2) 기업가적 국가

중국의 개혁개방 논리는 시장 대 국가의 대결 구도가 아닌 국가 중심의 계획을 부정하지 않는 전제 아래 시장을 잘 활용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중국의 성장을 시장 주도적 관점과 국가 주도적 관점의 대립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중국 발전모델의 특징을 많이 놓쳤다. 중국 발전모델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도 국가주의적 관점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며, 혹은 이 두 가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요인도 많다. 왜냐하면 국가의 보호 속에서 시장이 성장했고 시장주의적 조치를 확대를 나가면서도 사회주의적 보상 정책이 수시로 개입되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시장이나 국가나 하는 논쟁은 서구 자유주의 경제학의 영향을 받아 최근에 등장한 쟁점이며 개혁 과정 내내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사회주의적인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고 성장시킬 것인가였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 개발독재형 국가의 경우엔 국가 또는 관료들이 비록 기업의 경제 활동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혜택을 부여하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간접적인 것이다. 비록 상호 유착과 담합의 구조를 보이긴 하나 양자간 신분상의 구분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우엔 국가 관료와 사적 자본가간의 관계가 불분명한데, 후자는 이를 '혼성적인 국가-자본가'(hybrid state-capitalist)의 형태라고 규정하기도 한다.³⁵⁾ 왜냐하면 중국에서 정부 또는 관료가 직접 기업을 경영하는 식의 '기업가적 국가'³⁶⁾(entrepreneurial

34) 전성홍, 『중국모델론』(서울: 부키, 2008), p. 354.

35) Alvin, Y. So, "Introduction: Rethinking the Chinese Development Miracle," Alvin, Y. So(ed.), *Remaking the Developmental Miracle, Origins, Transformation, and Challenges*(Armonk, New York: M. E. Sharpe, 2003), pp. 3-26.

36) 1980년대 들어서 급격한 산업화를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시도하는 국가들은 '후-후발 산업화'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특수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국가들이 출현하였다. 권위주의국가, '군부파시즘', '신식민지파시즘', '종속파시즘'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 '관료적 권위주의'(bureaucratic authoritarianism), '신중상주의적 권위주의국가' '기업가적 국가'(entrepreneurial state), 신중상주의적

state)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다.³⁷⁾ 결국은 국가화된 자본주의에서 사적자본과 국가자본이 혼합된 체제로 전환되어다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국가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국영산업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그리고 권리를 강력하게 공격함과 더불어 비국가부문 경제의 실질적인 성장을 추진했다.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는 개별주체의 경쟁에 맡기고 국가는 단지 경쟁에 있어서 공정성과 경제정책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통제를 한다는 식의 원칙적인 이원론에서 출발하지만, 중국은 국가 스스로 시장거래의 참여자, 즉 시장에게 규율을 부여하고 그 유지를 감독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 등장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국가가 단지 고객으로 나타나는 경우와 국가적 기업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구별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 중국은 개혁 과정에서 국가가 시장에 대해 거시 조정 정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동시에, 관료들이 집체기업의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주체로서 시장에서 사영기업과 직접적으로 경쟁적 관계를 구성하기도 한다. 소위 국가(state)가 시장(market)에 대해 ‘간섭’(intervention)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 주체로서 ‘참여’(participation)까지 하는 이런 이중적 신분과 역할은 관료와 기업가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한다. 따라서 중국에서의 국가-시장 관계는 주로 시장에 대한 국가 간섭 문제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기존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임을 말해준다. 시장과 계획이 단순히 병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활동을 시장이 포괄하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서구의 경우엔 자본가계급의 등장에 따른 시민사회의 성장이 국가로부터의 시장의 분리를 용이하게 했으나 중국의 개혁에선 국가가 시장의 발생과 성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시장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지을 수 없고 상호 중첩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기능도 혼용된 특징을 지니고 있다.³⁸⁾ 중국 정부의 국유기업에 대한 정치적 보호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중국의 핵심 기업이라 할 수 있는 500대 기업의 주요 지표를 분석하면 이러한 경향이 명백하게 나타난다.³⁹⁾ 예컨대 중국 국유기업의 기업집단화 과정 역시 규모의 경제를 추구한 것이라기보다는 권력의 규모를 증시한 결과였다. 결국, 중국 특유의 국유기

준진시국가(Listian warfare state) 등은 초기산업화과정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국가형태와 기능을 제시하는 개념들이다.

37) Jane Duckett, *Entrepreneurial State in China: Real Estate and Commerce Departments in Reform*(London: Roulledge, 1998)

38) 전성홍, “중국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통권 116호(2007/2008 겨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p. 40.

39) 2006년 중국의 500대 기업의 소유제별 주요 지표별 분포를 보면 사유제 기업이나 집단소유제 기업보다 국유기업이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예컨대 기업 수에서 국유기업이 여전히 70%를 차지하고 있고 더욱이 영업소득이나 이윤총액, 자산합계 등의 측면에서는 80-90%대의 비율을 점하고 있다.(中國企業聯合會, 中國企業家協會, 2006).

업 지배구조 형성 과정에서 여전히 핵심 국유기업에 대한 국가의 정치적 보호와 통제가 여전히 존재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혁개방이전부터 중국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을 채택한 결과 전략 부문에 각종 자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중앙계획체제를 형성하였으며, 이러한 구조에서는 독자적 이해관계와 자율성을 갖지 않는 국유기업 체제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생산, 투자 등과 관련하여 정부가 할당한 계획지표를 수행하는 존재로서, 모든 수입을 재정에 상납하고 필요한 지출은 정부로부터 할당받는 이른바 ‘통수통지(統收統支)’의 제도 하에 있었다. 이에 따라 국유기업은 국가 계획에 따라 할당된 종업원과 원부자재를 이용하여 생산을 담당하고 생산물을 국가에 인도할 뿐,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마케팅, 새로운 시장 개척 등의 경영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정부의 금고 기지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은 독자적 자주권이 거의 없었고 정부의 단순한 수족에 불과했던 것이다.

또한 중국의 중앙정부는 자본주의 국가가 기업가나 기업의 발전을 위해 해내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개혁개방을 진행시키면서 가능한 한 많은 지방정부의 이익을 충족시켜 가거나 지방정부들이 모두 준수해야 할 공통의 행위 규칙을 만들고 집행시키고 있다.

3) 분권화

분권화(decentralization)는 많은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개혁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시장화와 같이 나타난다.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들은 대부분 계획경제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혁 초기에 중앙집권적인 의사결정에서 분권적인 의사결정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분권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정치적 분권화(political decentralization), 행정적 분권화(administrative), 경제적 분권화(economic decentralization)로 나눌 수 있다.⁴⁰⁾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 추진된 분권화는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을 수반하는 더 이상 과거의 ‘행정적 분권화’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의미의 시장에 기반한 분권화 역시 아닌, 이를테면 ‘지체된 시장화 속의 분권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

중국 개혁의 성공 요인을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이끌어 낸 분권화와 권력남용이

40) “정치적 분권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의미하는 지방자치와 기업자치를 의미한다. 행정적 분권화는 중앙이 가진 정책결정권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하며, 경제적 분권화는 중앙이 가진 정책결정권을 기업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과정에서 나타나는 분권화는 행정적 분권화와 경제적 분권화이며, 정치적 분권화는 체제전환 이후에 등장할 수 있다. 결국,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영역의 의사결정 분권화이며, 경제적 분권화는 구체적으로 지방정부와 기업소로의 권한분배를 통한 자율성 확대, 경제부문에 대한 당으로부터 국가경제부서로의 이양을 들 수 있다.” 김일기, 『체제변환론 관점에서 본 북한 개혁 개방 연구』, 건국대학사학위논문, 2006, p. 6.

나 사회 혼란 등을 통제 가능하도록 해 준 중앙의 권력 집중을 교차적으로 추진한 것이 성공의 결정적인 요인이자 중국적 특징이라는 것이다. 기업 분권화와 경제책임제 실시를 통한 계획체계의 해체과정은 재정, 금융, 가격 부문에서의 국가 거시정책 개혁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서 언급한 중앙과 지방 분권화를 통한 지방의 재정적 자주권을 확대함을 넘어서 일종의 수출자유지역인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을 설치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의 점진적 개방전략의 일종인데, 연안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하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만나는 중간지대에 대한 실험을 거친 후 그 성과를 내륙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다. 이것은 중국특색의 사회중심적인 시장화와 분권화의 실천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

중국발전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은 중국이 비록 발전주의적 형태를 띠지만 통치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 그리고 경제발전에 있어서는 정부와 인민대표회의의 역할이라는 이중적 구조에 의해서라는 점에서 기존 동아시아 국가들의 발전주의와 차별성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이런 중국적 특징을 ‘이원적 발전주의 국가’(dual developmental state)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중국은, 풍부한 인적 자원은 적극 활용하고 부족한 천연자원은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한편 대외개방 정책을 통해 지식자원 등 세계의 자원과 세계 시장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소위 대국의 규모와 부족 자원이라는 국내 여건이 중국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내향형(內向型) 경제로부터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끔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 경제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여러 가지 변화를 강요받지만 이와 동시에, 중국의 발전과 변화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양자 간에는 상호작용적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중국 지도부가 행하는 대중 행동의 기본 지침이 선부론이라면, 행동의 적극성을 유발하는 유인으로서 제시된 기제는 바로 방권양리(放權讓利)로 집약될 수 있다. 개혁 지도부는 기존 체제가 지닌 문제점을 크게 두 가지로 인식했다. 하나는 계획경제와 공유제가 초래한 비효율성과 생산의욕의 저하였으며, 다른 하나는 고도의 권력집중 현상으로 인한 각종 폐단이 그것인 바, 개혁은 이 두 가지 문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권한을 하방하고 이익을 허용한다”는 기본 원칙은 시장화, 사유화, 분권화, 개방화 등 개혁의 각 영역에 걸쳐 적용되었다. 권한과 이익의 이양은 기층의 자발성을 유발했고 이는 각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일으켰다.

특히 분권화는 중국 개혁을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전환이나 자본주의 후발 공업국의 산업화 과정과는 구분되게 하는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중국은—특히 1980년대에—사유화보다는 분권화를 통한 시장화 전환을 추진하였고, 이로써 경제발전 과정에서 지방정부가 보여준 역할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성과 역시 지역 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분권화는

지방과 하급 단위의 적극성을 유발함으로써 미진한 사유화의 부정적 효과를 상쇄하였으며, 광범위한 관료 조직을 대상으로 개혁노선에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함으로써 지체된 정치개혁의 효과도 보완해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점진주의 및 실험주의적 개혁 방식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보조적 기제의 역할을 수행했다. 예컨대 특구 지역과 같이 과거와는 달리 다양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받은 지방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개혁 정책 등의 측면에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실험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개혁에 있어서 다른 지역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 아니라, 이들 지역이 선부 지역으로 부상함으로써 타 지역의 추종을 자극하는 전시 효과도 지닌다는 것이다.

중국은 이런 과도기의 관계 규범으로서 청부제(承包制)를 적극 활용했다. 농업개혁(家庭聯產承包責任制), 기업개혁(經營承包制), 재정개혁(財政承包制) 등 여러 분야의 개혁들이 주요 행위 주체 간에 잠정적인 계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록 청부제가 상당 기간 제도적 기제로서 존재했으나, 보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는 제도와 비제도의 경계에 위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존 제도는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반면 새로운 제도는 건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협의를 통해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잠정적이고 임의적인 원칙들을 만들어 이를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를 구속하는 준거틀로 삼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중국인 특유의 유연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4) 글로벌 거버넌스

오늘날 세계화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상호의존성 증가에 따라 개별국가들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늘어나고 있다. 국내적 빈부의 격차뿐 아니라 국가 간 격차도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자유화 조치들로 인해 사회적 보호를 위한 규제는 풀려나가면서 사회복지가 약화되고 정치적 사회적 불안요인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화의 주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전통적인 산업부문의 단순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 더욱 궁핍화되고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다.

그러나 또한 국제적으로 세계화의 심화에 따른 과급효과와 불안정 요인을 감당할 제도적 차원의 관리(governance) 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전형적인 예가 1997년 시작된 동아시아 위기가 1998년도에 전 세계적 위기로 확산되는 과정이었다. 단기성 투기자본의 횡포와 이른바 도덕적 해이를 규제할 만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되지 않았으며 미국, 일본, 독일간의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국제금융체제의 보완을 위한 노력은 실패하였다. 결국 대공황의 우려까지 나오게 되는 심각한 국면이 진행되었다. 금융뿐만 아니라 지구 생태환경의 파괴, 인구 문제, 노동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국제적 관리체제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중국 역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 식량 등 필수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상품을 소화할 거대 시장을 필요로 하면서 국제체제에 깊숙이 편입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거시경제의 사이클에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기묘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국내 정치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국은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도전하기보다는 당분간 미·중 경제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지금까지의 관계에서 벗어나 “중국의 경제발전은 지역과 세계경제, 그리고 중국과 관계가 있는 동반자 국가들에게도 이익을 제공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주도의 국제질서를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국제기구 등 다자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현 질서의 유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며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21세기 국제경제 질서를 관리해 나갈 “세계적 차원의 협치(協治)의 기제”(global governance)로 인정하고, 이의 연례 개최를 통해 더욱 제도화시켜 나가자는데 합의하였다는 것은 비단 경제분야에서 만이 아닌 정치 분야에서의 향후 변화와 관련하여서도 중요한 의미를 시사한다.

5) 중국지도부의 리더십

많은 서방 사람들은 중국의 경제개혁 성공만 인정하고 정치개혁에는 불만을 갖고 있다. 그들은 오로지 자신들의 서구적 정치모델만 요구한다. 그들은 특정 국가의 제도가 서구의 소위 민주체제와 다를 때는 정치개혁을 아직 진행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이 시야를 보다 넓게 갖고, 서방의 민주체제와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각국의 특색에 맞는 민주체제를 인정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런 시각을 갖는다면 그들은 보다 관용적이고 평화적이며, 심지어 즐거이 감상하는 자세로 중국의 정치개혁을 볼 수 있다.⁴¹⁾

그러나 중국의 정치개혁은 이미 상당히 축적돼 있으며, 개혁의 심도와 폭은 외부에서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다. 중국이 특정한 환경 하에서 과거의 ‘정치분위 체제’와 ‘계획경제체제’에서 걸어 나온 과정은 정치변혁의 과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에는 발전단계에 따르는 적절한 정치개혁과 제도개혁을 통해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자 노력하는 중국지도부 고민이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노력은 중국지도부의 타협능력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보수세력이 고개를 들 때엔 노선을 말하고 정치를 이야기했으며, 개혁세력이 부풀어 오를 땐 경제를 논하며 개혁을 실패했다. 타협만이 당의 분열을 막고 자신의 지위를 지킬 수 있는 비방(秘方)이라고 본 것이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중국의 리더들은 중요한 정책이나 노선의 변화를 반드시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고 합리화하였다. 등소평은 사회주의계획경제를 버리고 사회주의시장경제가 작동하게 했고, 또 97년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중국의 사회주의는 초급단계에 처해 있어 생산력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

41) 〈출처: 인민일보 해외판 3월30일, 연합조보 4월1일〉

해선 자본주의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리, 당시 국유기업 개혁을 위해 자본주의 요소인 주식제 도입이 필요했다)을 역설함으로써 노선갈등과 파벌주의를 극복해왔다.

2. 중국모델의 한계

1) 성공의 역설

중국의 개혁개방을 바라보는 시각들 중의 하나가 중국의 경제적 성장이 과연 지속할 수 있는가이다. 20세기 '부강한 중국'의 등장에 놀라면서 21세기는 중국을 빼고 설명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 패러독스가 등장한다. 중국의 경제발전과 성공은 결국 중국의 탈사회주의화와 민주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중국식 발전전략과 중국모델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성공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데 많은 관심을 갖게 한다. 중국모델은 개혁개방정책으로 고도성장의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중국사회의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 세계화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성과를 올리고 있지만, 바로 그런 성공이, 그리고 그런 성공에 수반되는 불균등 발전전략의 부작용이 역설적으로 중국의 성공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곧 시장경제가 창출하는 경제적 풍요와 선택의 다양성은 시장과 민주주의간의 친화력의 원천을 제공하는 덕택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토양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일원성을 강조하는 중국공산당의 우위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이다. 서구의 경험에 비추어 본다면 경제발전은 두터운 증산층을 낳을 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출현시키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시민권의 확대를 요구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발원되는 밑으로부터의 다양한 요구와 양극화의 대한 민중들의 요구는 체제안정성을 저해요소가 된다는 점이다.

분권화의 경우도, 분권화와 그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힘이 상당히 작용하였는데 이제 지방정부의 지방보호주의 등의 문제가 지역간분할주의로 나타나면서 중국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무시할 수 없다.

2) 중간소득의 함정

개발도상국가가 특정한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몇 가지 위기국면이 형성된다. 그 중에 하나가 이른바 '중간소득 함정'이라는 말은 한 국가의 1인당 평균소득이 중등수준에 도달한 후 순조롭게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을 실현시키지 못하면서 경제성장의 원동력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결국에는 경제 정체 상태에 빠져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이 1만 달러를 돌파하기 힘든 상황을 일컫는다. 세계은행의 표준에 따르면 2010년 중국은 1인당 평균 GDP가 4000달러 이상에 달해 이미 중간소득 함정 국가의 대열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소득 함정'에 빠진 국가들이 보이는 10대 특징은 경제성장의 하락 혹은 정체, 민주화 혼란, 부패가중, 빈부차 극심, 지나친 도시화, 사회공공서비스 부족, 취업난, 사회동요, 신앙 부족, 금융시스템 미비 등이다.

20세기 중반 이후 경제가 저소득에서 중간 수준의 소득으로 옮겨갈 때 겪는 어려움인 이른바 중간 소득의 함정(middle income trap)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는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곧 소득불평등구조가 갖는 발전과 성장의 한계(성장 정체)와 더불어 중진국의 수준과 범위에서 선진국의 수준으로 전환을 포함하는 것이다. 중국정부가 경제하부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내수 확장을 위해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은 결국 저축을 적게 하고 덜 투자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투자 중심의 성장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경제의 성장률은 당연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같은 연장선에서 가장 민감한 실업문제가 불거져 나올 수 있음은 물론이다. 중국의 규모와 줄줄이 해결해야 할 구조조정 과제 등을 고려하면 중국이 이 모두를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즉 국민 대다수가 평등주의 이상을 내건 정치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평등주의 이상은 항상 인류와 함께 해왔고 중요한 정치 이념으로 영향을 미쳐왔다. 문제는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특수한 상황이 평등주의 이상을 믿는 국민을 다수로 만들어내는가 하는 점이다. 다시 말해 중진국으로의 도약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수평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가 수직적 세계관을 믿는 국민의 수보다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이 바로 중진국 함정의 원인을 규명하는 길이 될 것이다.

비교론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오늘날의 부유한 국가들은 빨리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천천히 성장했기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따라서 후발 주자들은 적어도 성장 속도라는 관점에서 선발 주자들과는 다른 길을 걸은 것만은 분명하다. 그 결과가 불균형 성장인데, 문제는 동아시아 경제의 역사에 비추어, 수출지향형 경제에서 균형경제로 옮겨가는 것이 자연스럽고, 고통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경제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은 경제성장률의 조정과 증산층의 안정화정책과 육성정책이다. 또한 중국정부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설정한 12차 5개년 계획에서 내수소비 진작, 소득불평등 해소 등을 위해 노력이 실현된다면 그 위기는 완화될 것이다.

중국은 세계 역사상 한 번도 존재해본 적이 없는 거대국가다. 따라서 중국의 흥망은 세계인 1/4의 흥망이라 달리 표현할 수 있고, 세계인 모두에게 커다란,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결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닌 것이다. 중국이 안정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 세계 모두가 평안하게 사는 길이다.

V. 결 론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사회주의 2류 국가로 잔존해 있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을 그렇게 취급하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늘날 중국은 자본주의의 공장으로서

미국을 대체할 세력 내지 미국과 패권을 경쟁할 국가로 취급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이 이룬 성과에 대한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또한 중국은 '민주주의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혼합 정치체제는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실제로 중국 당정은 우수한 위기관리 능력을 지녔으며 독자적인 발전 경로를 걸어왔으며, 체제에 대한 장악력이 현저히 떨어지지도 않았다. 또한 중국에서 새로운 체제 변화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자유민주 체제라고 할 수도 없다. 이런 점에서 경제발전의 결과가 정치 발전을 추동하여 궁극적으로 '성공의 역설'(Irony of success)⁴²⁾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을 벗어날 수도 없다.

중국의 경험이 유사한 발전 단계를 가진 다른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와 교훈을 정리하고자 한다. 과거에 보여 준 중국식 체제전환의 독특성에서 앞으로 중국식 체제 유형의 정립까지를 '중국모델'로 정의한다면, 그것을 단지 한 국가에 한정된 '중국적 특수성'만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엄청난 것이다. 그 이유는 중국의 경험이 30년 넘는 장기간 동안 일관되게 자신의 독특한 논리를 개발하고 관철시키고 있다는 점, 인류사의 그 어떤 국가보다도 큰 국가 규모와 이에 따른 지구적 영향력(global impact)이 매우 크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는 중국의 경험이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의 성과(performance)를 보여 주었다는 점 때문이다.⁴³⁾

중국의 발전 경험 또는 중국식 발전모델은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유형의 국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 먼저 체제전환 국가에게는 성공적 체제전환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과 개혁 지도부의 강력한 리더십이 중요한 전제 조건임을 알려 준다. 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 과정에서도 사회주의적 정치 질서인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가 충분히 유지될 수 있으며, 전환 과정에서는 더 유효한 체제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⁴⁴⁾

다음으로 개발도상국에게 주는 함의도 매우 크다. 개발도상국은 초기 추격 전략에서 선진국의 경험과 제도를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 학습이 단순한 모방이나 무비판적인 제도 이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즉 해당 국가의 특성과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창조적 학습 또는 혁신(創新)의 과정이어야 한다. 중국이 일관되게 보여 주었던 독자적 발전모델의 모색 과정은 '선진국 따라 하기'가 아닌 자신의 '특수한 조건과 역사적 맥

42) Michael D. Swain, Ashley J. Tellis, *Interpreting China's Strategy : Past, Present, and Future*, pp. 183-187.

43) 전성홍, 『중국모델론』, p. 355.

44) 중국의 발전 경험에 대한 이런 관점은 최근 '중국모델'(中國模式) 논쟁에 동참하는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이 대동소이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Nolan은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진 대표적인 서구 학자로, 주로 소련 및 동구 국가와 중국의 체제전환 과정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이런 관점을 강조한다. 주요 문헌으로는 다음을 참조. 俞可平 外, 『中國模式與“北京共識”：超越“華盛頓共識”』；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Peter Nolan, *Transforming China: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pp.3-4.

락' 속에서 자기식 경제발전과 시장경제 모델을 추구하려는 노력의 전형을 보여 주었다.⁴⁵⁾ 특히 선진국(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많은 개발도상국에게 중국의 경험은 '개방'을 통해 세계화에 편승하면서도 자신의 특수한 조건에 맞는 새로운 제도의 창의적 혁신(創新)을 병행할 때에만 성공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⁴⁶⁾

WTO 가입 이후 제4세대 지도부가 제출한 새로운 발전 전략은 '목표 중심'의 개혁 논리를 제시하여 중국 지도부의 장기적·전략적 대안 모색에 대한 근본적 고민을 확인했으며, 그 구체적 전략과 지향도 과거에 비해 점차 명료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구체적 방향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계화 추세에 적극 편승하되, 신자유주의 이념의 무비판적 확산을 경계하면서 중국식 체제 모델을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앞으로 중국의 진로는 과거 전환 과정과 유사하게 중국의 독특한 발전 경로를 유지할 것이며, 따라서 중국의 발전모델과 체제 유형을 설명하려는 '중국모델' 연구의 의의는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⁴⁷⁾ 중국의 발전모델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대한 전면적 거역은 아닐지라도, 이를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서구적 수렴보다는 '중국식 제3의 길'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적으로 정치영역에서 중국지도부의 리더십에 의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최종적으로 민주주의의 확산을 통한 균등한 공화주의적인 요소에 의한 안정적인 발전경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신권위주의적인 방법에 의해서 지속된다면 앞으로의 행로는 예측하기 어려울 것이다. 경제학 이론 분야에 있어서도 중국의 경제발전이 서구식 자본주의 논리나 신자유주의적 해석에 의존해선 안 되며, '현상의 분석'에 있어서나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주의적인 이론적 기초에 입각해야 한다면 성공과 실패는 동시에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5) 세계화 시대에 선진국의 제도와 경험을 개발도상국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또는 개발도상국이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는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추격 전략이 결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대표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조지프 스티글리츠, 송철복 역, 『세계화와 그 불만』 (서울: 세종연구원, 2002); 장하준, 형성백 역, 『사다리 걷어차기』 (서울: 부키, 2004).

46) 전성흥, 『중국모델론』, p. 356.

47) 위의 책, p. 355.

《참고문헌》

- 강선주, “신국제질서논의: ‘워싱턴 컨센서스’와 ‘베이징 컨센서스,’”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09-29, 2009.
- 김근식,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 변화,” 「통일과 평화」, 2집 2호, 2010.
- 김선혁, “국제행정과 초국가거버넌스,” 「한국행정학보」, 38(2), 2004.
- 김시중, “중국경제 얼마나 독특한가?” 「경제학연구」, 제53집 2호, 2005.
- 김원호, “중남미의 발전모델은 순환하는가?”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7, No. 4,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2004.
- 김일기, 「체제변환론 관점에서 본 북한 개혁 개방 연구」, 건국대박사학위논문, 2006.
- 백종국, “‘한국발전모델’ 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계에서 나타난 연구들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제45집 제1호.
- 이문기, “WTO시대 중국의 발전패러다임 수정과 ‘중국모델’의 모색,” 「東亞研究」, 第54輯(2008年 2月).
- 이희옥, 『중국의 새로운 사회주의 탐색』, 서울: 창비, 2007.
- 장하준/형성백(역), 『사다리 걷어차기』, 서울: 부키, 2004.
- 전성홍, “중국모델의 부상: 배경, 특징 및 의미,” 「중소연구」, 통권 116호(2007/2008 겨울),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 전성홍, 『중국모델론』, 서울: 부키, 2008.
- 鄭必堅,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과 아시아의 미래,” 鄭必堅/이희옥(역), 『중국 평화부상의 새로운 길』, 오산: 한신대학교 출판부, 2007.
- 조영남, “중국의 소프트파워와 외교적 함의,” 손열(편), 『매력으로 엮는 동아시아: 지역성의 창조와 서울컨센서스』, 서울: 지식마당, 2007.
- 조영남, 『후진타오 시대의 중국정치』, 서울: 나남, 2006.
- 최봉대, “사회주의 체제전환 방식의 비교연구,” 윤대규(편), 『사회주의 체제전환에 대한 비교연구』, 파주: 한울, 2008.
- 崔之元, “制度創新與第二次思想解放,” 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 胡鞍鋼, “對中國之路的初步認識,” 黃平·崔之元, 『中國與全球化: 華盛頓共識還是北京共識』,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5.
- 吳敬璉, “如何實現穩定和有效的增長,” 中國經濟信息, 271(21), 2003.
- 蔡拓, 探索中的中國模式, 『當代世界與社會主義』, 2005년 제5기.
- Alvin, Y. So(ed.), *Remaking the Developmental Miracle, Origins, Transformation, and Challenges*, Armonk, New York: M. E. Sharpe, 2003.
- Duckett, Jane, *Entrepreneurial State in China: Real Estate and Commerce Departments in Reform* London: Routledge, 1998.
- Eisenstadt, Shmuel N., *Modernization: Protest and Change*, Englewood Cliffs, N. J. :

- Prentice-Hall, 1966, p. 1.
- Gershenkron, Alexander, *Economic backwardness in historical perspective*, Cambridge, MA: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 Press, 1962.
- Halper, Stefan, *The Beijing Consensus: How China's Authoritarian Model will dominate the Twentieth Century* New York: Basic Books, 2010, pp. 206-208.
- Kornai, Janos, *The Socialist System: The Political Economy of Communis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2, pp. 386~392.
- Naughton, Barry, *Growing Out of the Plan: Chinese Economic Reform, 1978-19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Nolan, Peter, *Transforming China: Globalization, Transition and Development*, London: Anthem Press, 2004, pp. 3~4.
- Pan Wei, "The Chinese Model of Development," Oct 11, 2007, London
(<http://fpc.org.uk/fsblob /888.pdf>), pp. 2-3.
- Perracca Mark P. and Mong Xiang, "The Concept of Chinese Neo-Authoritarianism: An Exploration and Democratic Critique." *Asian Survey*, Vol. 30, NO. 11 (1990), pp. 1099-1117
- Rajan, Raghuram, *Fault Lines: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10, p. 59.
- Ramo Joshua Cooper, *The Beijing Consensus*, London: The Foreign Policy Centre, 2004.
- Ruggie, John G., "Finding Our Feet in Territoriality: Problematizing Modernity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national Organization*, 47(1), Winter 1992.
- Ruggie, John G., "Multilateralism: The Anatomy of an Institution," In John G. Ruggie(ed.), *Multilateralism Matter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Sautman, Barry, "Sirens of the Strongman: Neo-Authoritarianism in Recent Chinese Political Theory," *The China Quarterly*, No. 129(1992), pp. 72-102:
- Stiglitz, Joseph 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New York: W. W. Norton and Company, 2002, p. 53.

〈동북아연구〉

《Abstract》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China Model

Lee, Kyoung-Hee

Debates on China's future and prospects - whether China's future is threatened or still full of opportunities, whether civilizations are clashing or harmonizing, free market, legal democracy, legal governance, good governance, or liberal take on human rights - are diverse and very heated.

This paper seeks to analyze whether China's economy, which has developed in a remarkable speed through the China Model, can sustain its development. In doing so, the paper also seeks to ascertain the limits of the China Model.

Although China significantly lacks democracy, its hybrid political system is relatively stable. In fact, China's government and its Party is very capable at crisis management, has continued its independent development when there was no model for path dependence after the fall of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and has maintained control over the political system.

China's persistent effort to devise its own development model demonstrates its effort to seek its unique economic development and market economy model in lieu of China's specific conditions and historical context. Thus, to describe what goes on in China,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use the China Model theory, rather than Western paradigms such as "modernization" or the Washington Consensus.

Key Words: China Model, Entrepreneurial State, Decentralization, Leadership, Washington Consensus, Beijing Consensus

투고일 : 2011.10.30 / 심사일 : 2011.11.25 / 심사완료일 : 2011.12.25